

이공계 기피와 청소년 엑스포

지난 8월은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갖가지 행사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가 8월 14일부터 5일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의도 전시관에서 열렸는가 하면 과학기술인 연합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이공계 기피 대책'에서 제외되었던 '정부내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대대적인 청원 운동이 벌어졌다.

한국 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과학 등이 후원한 '청

소년 이공계 진로 엑스포'는 청소년을 이공계에 흡수하려는 첫 공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시회에는 23개 이공계 학회와 전국 22개 대학이 참여, 공개 강좌와 함께 청소년의 진로를 상담하는 등 사업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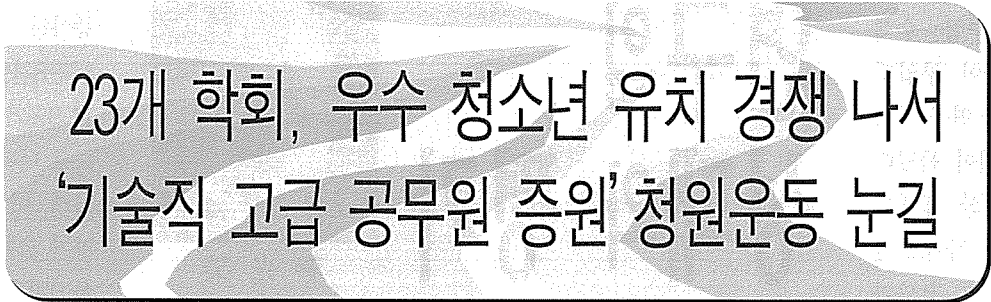
특히 이 전시회에서는 이공계 학회들이 총동원되고 학회장 등 간부들이 직접 청소년의 진학 상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공계 대학들도 화려한 부스 등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이처럼 학회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청소년 진로에 나선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 표면화된 '이공계 기피'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 씩씩한 뒷맛을 남겼

다.

이 전시회는 준비기간이 짧고 전시 장소가 외져서 다른 공개행사에 비해 방문객이 적었지만 과학기술계가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자고 나섰다. 이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중론이다. 이 '청소년 엑스포'는 다음에는 청소년 접촉이 쉬운 곳과 진학 관심도가 높은 신학기 초에 연다면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인 '이공계 기피'를 막을 수 있는 처방의 하나가 될 수

점에서 현재 교육수석이 맡고 있는 과학기술을 분리, 수석비서관으로 승격시키거나 아니면 과학기술 특보실을 신설, 과학기술 정책을 관장하는 안들이 건의되어 있었다. 최근 첨단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적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활동을 통합·조정하는 과학기술 수석이나 특보 신설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연합이 주장한 과학기술계 부처의 장·차관을 반드시 과학기술자 출신으로 임명하는



있을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인 연합이 청원키로 한 '정부내 기술직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정부의 대책에서 제외되었던 문제의 하나이다. 이 연합은 성명에서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장·차관에 과학기술자 출신을 임명하고 *현재 10%선인 기술직 국·과장급을 30%로 향상하며 *이를 위해 현재 5:1로 되어 있는 행정:기술 고시의 비율을 앞으로 5년내 1:1로 조정하고 행정고시에 과학기술 과목을 공통으로 치르는 등 4개항을 청원했다. 이 연합이 요구한 4개항은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문제들이다. 과학기술 정책이 통치자의 영향이 커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문제는 장·차관이 정책관리자라는 점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이지만 기술직 고급 공무원의 증원 문제는 화급한 문제이다. 과학기술을 모르는 공무원이 기술직을 차고 있으니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내려앉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과학기술을 주업으로 삼는 과기부는 기술직 보충률이 50%밖에 안되고 산자부나 정통부는 3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직 보충은 차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적어도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서만은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되어야 한국 관료사회에서 고질병이 되고 있는 만성적인 행정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赤潮’ 의면하는 과학기술

미 과학자가 노블(Noble)이 저술한 「America by Design」을 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미국 과학계가 19세기에 서 20세기 초에 걸쳐 진행했던 이른바 ‘미국 산업혁명’에서 얼마나 헌신적인 공헌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가령 대학들이 몰려 있는 보스턴 지역에서 화학공업이 대학을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철강업도 역시 피츠버그에 위치한 대학이 유럽의 신기술을 받아 들여 이 지역을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공업지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 근대사를 보면 과학기술이 기초와 응용을 막론하고 사회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수도룩하다. 미국에서는 과학기술이 산업발전은 물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곶감’과 같은 존재이다.

70년대 미 동부지역에서는 까마귀과에 속하는 조류가 이상 증식을 하는 바람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었는데 한 엔지니어의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 새의 이상 번식을 막는 데 성공, 화제가 됐다. 비가 오는 한밤중에 비행기로 이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산악지대에 세제액을 뿌리는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새의 증식을 막은 것이다. 나무에서 잠을 자는 이 새들

은 비를 맞아도 몸에서 분비되는 기름기 때문에 비에 젖지 않는다. 그러나 세제액을 항공살포할 경우 새의 몸을 막고 있는 기름층이 파괴되어 결국 비는 새의 몸에 스며들게 되는 상태에서 기온이 내려가면 동사, 이상 번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 등 선진국 과학기술계에서는 사회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서 해결을 했던 사례가 수없이 많다.

일어나도 과학기술계가 뒷짐을 지고 방관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올 여름에도 남해안 일대를 강타하고 있는 적조의 경우 80년대 이후 해양오염이 악화된 이후 매년 연례행사처럼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 재앙’이다. 그러나 이런 재난이 등장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단지 적조발생 해역에 황토를 뿌려 해조류가 바다 바닥에 가라앉게 하는 원시

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과학기술계의 ‘수

어민 울리는 ‘환경재앙’ 원시적 대책 급급 미 과학계 ‘사회문제 해결’ 과 대조 이루어

최근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호소에 중국에서 건너온 가물치 종류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해서 나라가 온통 난리들인 모양이다.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과학계가 앞장서 대책을 내어 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늪이나 호소에 저독성 농약과 제초제를 투입, 중국 가물치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들이 생태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외래종’을 효과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우리가 이런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문제가 생기면 과학기술계가 중지를 모아 처방을 내어 놓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셈인지 이런 일이

동적인 자세 만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책 당국이나 피해 당사자들이 과학기술계의 지혜를 이용하려는 적극성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이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을 씻으려면 과학기술계가 ‘적조’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과학이 국민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고 ‘이공계 기피’ 현상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적조 하나만이라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과학기술이 되기를 바란다. ⑤7

姜信龜 (한서대 교수)